

멀어진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합의 추대'

광주 의원 8명, 수차례 회동에도 입장차 못 좁혀 이병훈·조오섭·민형배, 각각 경선 준비 절차 돌입

코로나 19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 형태로 선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광주 시당은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자리 욕심'보다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로 표방하면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차분한 가운데 경선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광주 정치권의 '원·팀'에 균열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진다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가

능성이 높아 경선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시당위원장에 뜻이 있는 이병훈(동남을), 조오섭(북구갑),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현 위원장인 송갑석(서구갑) 의원의 중재로 수 차례 회동을 갖고 합의 추대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역 전체 8명의 의원들이 수차례 모여 회동을 하고, 송갑석 위원장과 출마예정자 3명 등 4명이 따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모두 "경선없이 추대 형태로 시당위원장을 뽑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누구로 정할지'

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갑부에 연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민심의 눈길이 뜨겁다는 점에서 시당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일 막판까지 세 의원들 간의 밀당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세 명의 의원은 각각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의원을 도당 위원장 후보로 합의 추대했다. 전남지역 의원들은 지난 23일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김승남 의원이 대화를 통해 도당위원장 후보로 김 의원으로 단일화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도당 위원장 출마를 저울질 하던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출마를 접으면서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에는 김 의원이 단독 출마하는 형태로 합의 추대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전남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오는 8월 8일 열릴 예정이며, 29-30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선에 따른 선거운동 설명회와 기호추첨을 거쳐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8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걸쳐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ARS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결과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장 대의원대회 권한을 위임받아 8월 8일 개최되는 시당사무위원회에서 전국대의원투표(50%)와 권리당원투표(50%) 결과를 합산해 발표할 예정이다. 단독후보일 경우 사무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 시당위원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 3법 의결

중부세·법인 양도세 인상 등...분양권 주택 포함 내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중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통합당, 부동산 내로남불 ... 의원 40%가 다주택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기자회견...1인당 평균 21억 민주당 보다 2배 많아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서 정부 정책 비난...본인은 20억 차이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 총선 이후

매입하거나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이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천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현 의원(170억2000만원), 김은혜 의원(168억5000만원), 한무경 의원(103억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어 100억원대 부동산재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길 의원(67억1000만원), 김기현 의원(61억8000만원), 정점식 의원(60억1000만원), 강기운 의원(52억원), 박성중 의원(49억7000만원), 김도읍 의원(41억5000만원) 등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이들 10명의 부동산재산 신고 총액은 10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연합뉴스

행안위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안' 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 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였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기로 했

다. 일정 가액 이상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고, 종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이나 별장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면 종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 취득 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대책을 발표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 숙원 푸나

소병철·주철현 등 전남 의원 5명 법안 공동발의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공동발의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주철현(여수갑)·김희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의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특별법은 유족 등과 속의 과정을 거친 최초의 단일법안으로서 그동안 개별 의원 발의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이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에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부칙에 담았고,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과 위령 사업에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 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법과 구별된다. /오광록 기자 kroh@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